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064
----------	------

발의연월일 : 2024. 10. 30.

발 의 자 : 박덕흠·안철수·강대식
김소희·이헌승·박정하
이양수·김성원·나경원
서천호·최은석·박정훈
김민전 의원(13인)

제안이유

자연휴양림등 조성사업이 '23년부터 지방이양됨에 따라 공·사립 자연휴양림의 지정·해제 및 원상복구 명령권한 등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여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또한 자연휴양림, 숲길 등 사업을 실행하기 전 타당성 평가를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으나, 타당성 평가를 실행한 기관·단체에서 해당 사업(설계·시행·감리)을 실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공정성 문제 제기의 우려가 있음.

이에 공정한 사업추진을 위해 법률에 타당성 평가에 참여한 기관·단체의 해당 사업 참여에 제한을 두어 공정한 평가가 되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자연휴양림 지정·해제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안 제13조, 제19조)

- 자연휴양림 지정권한은 국·공·사 구분없이 산림청장에게 있었으나 산림 소유권한 또는 산림청 소관 국유림 대부등의 비중에 따라 지정권한을 구분하여 운영

<지정권자>

- * 시·도지사 : 공·사립, 지정신청 면적의 50% 미만이 산림청 소관 국유림을 포함하는 경우
- * 산림청장 : 국립, 지정신청 면적의 50% 이상 산림청 소관 국유림을 포함하는 공·사립자연휴양림

- 자연휴양림 해제권한을 지정권자(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할 수 있도록 권한 조정

나. 자연휴양림,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의 승인취소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권자를 시·도지사에게 위임(안 제16조, 제21조)

- 자연휴양림, 산림욕장등 조성계획의 승인 및 취소권자가 시·도지사에게 승인취소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권한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여 자율권과 책임성을 함께 부여

다. 자연휴양림등, 숲길 조성 시 타당성 평가를 한 기관 또는 단체는 해당 사업의 설계·시행·감리 참여 제한(안 제21조의2, 제23조)

- * 자연휴양림등 :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시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전단 중 “산림청장은”을 “시·도지사는”으로, “포함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정신청 면적 중 2분의 1 이상이 산림청 소관 국유림의 대부분을 받은 산림인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지정한다.

제1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자연휴양림을 지정하려면 미리 산림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3조제4항(중전의 제3항) 전단 중 “산림청장은”을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4항) 중 “산림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산림청장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제3항 중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때에”를 “시·도지사”로, “명하거나 제14조제6항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한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을 “명할”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4조제6항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한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16조제4항 전단 중 “산림청장은”을 “시·도지사는”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림청장은”을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자연휴양림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지정 구역의 10분 1 이상을 변경하려면 미리 산림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9조제2항 중 “산림청장은”을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산림청장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제3항 중 “산림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통보를 받은 때에”를 “시·도지사”로, “명하거나 제20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한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을 “명할”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제7항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한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21조제4항 전단 중 “산림청장은”을 “시·도지사는”으로 한다.

제21조의2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타당성 평가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해당 사업에 대한 설계·시행 감리에 참여할 수 없다.

제2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및 제5항(중전의 제4항) 중 “제2항”을 각각 “제3항”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타당성 평가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해당 사업에 대한 설계·시행 감리에 참여할 수 없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타당성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2 및 제2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타당성 평가는 이 법 시행 후 타당성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은”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으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자연휴양림의 지정) ① (생략)	제13조(자연휴양림의 지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산림청장은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소유자(사용·수익할 수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32조에서 같다) 또는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이하 “대부등”이라 한다)를 받은 자(받으려는 자를 포함한다)의 지정 신청에 따라 그가 소유하고 있거나 대부등을 받은 산림(받으려는 산림을 포함한다)을 자연휴양림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 신청의 절차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단서 신설>	② 시·도지사는 ----- ----- ----- ----- ----- ----- ----- 포함한다. <u>이하 이 조에서 같다</u>)----- ----- ----- -. 다만, 지정신청 면적 중 2분의 1 이상이 산림청 소관 국유림의 대부등을 받은 산림인 경우에는 <u>산림청장이 지정한다.</u>
<신 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자연휴양림을 지정하려면 미리 산림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자연휴양림으로 지정하려는	④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 -----

산림에 둘러싸인 토지 중 자연휴양림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를 자연휴양림에 포함하여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된 토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산림으로 본다.

④산림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자연휴양림을 지정할 때에는 이를 신청인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자연휴양림의 명칭·위치·지번·지목·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⑤ (생략)

제16조(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승인 취소 등) ①·② (생략)

③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승인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 산림의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제14조제6항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한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후단 신

-----.

⑤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

-----.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제16조(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승인 취소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시·도지사는-----

----- 명할 -----

-----.

-----.

설>

④산림청장은 제3항에 따라 산림의 원상복구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하여 대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지관리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예치한 복구비로 충당할 수 있다.

제19조(자연휴양림의 지정해제 등)

①산림청장은 자연휴양림으로 지정된 산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거나 지정된 구역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후단 신설>

1. ~ 3. (생략)

②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연휴양림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지정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4조제6항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한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④시·도지사 -----

-----.

제19조(자연휴양림의 지정해제 등)

①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

--. 이 경우 시·도지사는 자연휴양림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지정구역의 10분 1 이상을 변경하려면 미리 산림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 3. (현행과 같음)

②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

된 구역의 일부를 변경한 때에는 이를 산림소유자 또는 대부등을 받은 자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자연휴양림의 명칭·위치·지번·지목·면적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21조(산림육장등조성계획의 승인 취소 등) ①·② (생략)

③산림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통보를 받은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 산림의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제20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한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④산림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림의 원상복구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하여

이 경우 시·도지사는 산림청장에
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산림육장등조성계획의 승인 취소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시·도지사

명할

이 경우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제7항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한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④시·도지사는

대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집행
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지관리
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예치
한 복구비로 충당할 수 있다.

제21조의2(자연휴양림등의 타당성
평가) ①·② (생략)

<신설>

③·④ (생략)

제23조(숲길의 조성 등) ① (생략)

<신설>

② (생략)

③ 제2항에 따라 숲길의 노선이
지정·고시되면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
신고를 하거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

제21조의2(자연휴양림등의 타당성
평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라 타당성 평가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해당
사업에 대한 설계·시행 감리에
참여할 수 없다.

④·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제23조(숲길의 조성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타당성 평가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해당
사업에 대한 설계·시행 감리에
참여할 수 없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④ 제3항-----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숲길조
성계획의 수립, 타당성 평가의 절
차, 숲길 명칭의 부여, 숲길 노선
의 지정·변경·지정해제 및 그
고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
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⑤ ----- 제3항-----

-----.